



민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대책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추석 밥상 ‘민생’ 올리기 주력

국무회의 “소외된 분들 살피라” 여의도발 ‘정쟁’ 과 거리두기



들과 만나는 일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군부대 시찰 일정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추석 연휴 기간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등 여파로 국회 운영이 멈추고 정치 실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의도발 ‘정쟁’ 과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방안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쟁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연휴에도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당일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을 포함해 연휴 기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휴일에도 쉬지 않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명절 기간 물가안정과 소비 계층 돌보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저녁 미국 뉴욕에서 귀국한 직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지역 행사로 달려가 몸소 내수 진작에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애둘러 던졌다. /연합뉴스

“중대 범죄” vs “터무니 없는 소설”

오늘 이재명 영장심사 쟁점은

백현동·대북송금 범행 동기부터

과정까지 쟁점마다 격돌 전망

검찰 수사 성패...이, 명운 달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쟁’ 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천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 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톨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그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져야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

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오히려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 도 양측이 맞부딪힐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역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협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봉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친명’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막판 단일화 변수

김민석·홍익표·우원식·남인순

‘경선보단 추대’ 성사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25일 막판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26일 치러지는 경선에는 3선의 김민석·홍익표 의원과 우원식(4선)·남인순(3선) 의원(이상 기초순)이 출마표를 던졌다.

모두 ‘친명’ (친이재명) 계 색채가 있는 후보들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표 단속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비명(비이재명) 계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다.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가장 선명하게 ‘친명’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구속영장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수가 온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육중 공천’ 가능성 질문에도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승리의 길”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그계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판단이고 뜻”이라고 답했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4월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협지인 ‘서초을’ 출마를 선언하는 등 개혁적 색깔이 강하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

을 위한 국민연대’ (민평련) 대표를 맡고 있다.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남인순 의원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출마의 변에서 “검찰을 앞세운 부당한 야당탄압에 맞서 이 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검찰 독재정권의 비열한 작태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2017년 원내대표를 지내 사실상 당내에서 처음으로 ‘원내대표 재선’ 에 도전하는 우 의원의 경우 친명 초선 의원들의 강력한 권유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민석·홍익표·남인순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됐던 선거는 우원식 의원이 마감 직전 후보로 등록하면서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막판 단일화나 중도 포기 이번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우원식·남인순·홍익표 의원의 경우 더미래, 민평련 등 당내 지지 기반과 색깔이 겹쳐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당이 대혼란인 상황에서 경선보단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을 통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우 의원을 지지하는 일부 초선 의원들은 후보 단일화를 통한 사실상 우 의원 추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